

서울특별시 온라인 평생교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3700번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6년 5월 26일
- 회 부 일 : 2026년 5월 27일

2. 제안이유

- 온라인 평생교육 지원 대상을 다자녀 가족의 모든 자녀로 확대하여 다자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다자녀가구 지원 대상 제한 규정 삭제 (안 제7조제1항제6호)
- 나. 재혼가정 자녀 순위 산정 관련 단서 삭제 (안 제7조제1항제6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사회보장기본법」
- 나. 예산조치: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창의규제담당관(규제심사): 규제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있음(미반영).
 - (양성평등담당관 의견)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상 ‘다자녀 가족’ 기준에 준하여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족으로 대상 확대 제안
 - ⇒ (미반영 사유) 타당성 인정되나, 일시에 2자녀 가구 전체로 확대하는 경우 급격한 예산 소요로 인해 사업 안정적 운영 저해 우려 있으므로 재정 여건 및 연차별 성과 기반으로 순차 확대 검토
- (5) 규제개선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 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해당 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6. 3. 12. ~ 4. 1.) 결과: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5. 검토 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안’)은 취약계층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 교육지원 사업(통칭 ‘서울런’) 대상을 다자녀가족의 모든 자녀(3자녀 이상 가족의 ‘둘째 자녀 이상’ → 3자녀 이상 가족의 모든 자녀)로 확대 및 간소화(재혼 가정 관련 단서 삭제)하고자 서울특별시장의 제출하였음.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교육지원 사업) ①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6세 이상 24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10호 및 제11호의 경우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더라도 지원 대상으로 한다. | 제7조(교육지원 사업) ① ----- ----- ----- ----- ----- ----- -----. |
| 1. ~ 5. (생략) | 1. ~ 5. (현행과 같음) |
| 6.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둘째 자녀 이상의 아동·청소년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의 순위로 정한다. 다만, 재혼가정 | 6.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아동·청소년 |
| 의 경우 「주민등록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상 공부로 | |

| | |
|---|---|
| <p><u>증명되는 쌍방의 친자를 모두 자녀 수에 포함하되, 현재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순위에 포함한다.</u></p> | |
| 7. 8. (생략) | 7. 8. (현행과 같음) |
| 9. 「 <u>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u> 」 제4조제1항제3호의 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청소년 | 9. 「 <u>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u> 」 제4조제1항제3호----- ----- |
| 10. ~ 12. (생략) | 10. ~ 12.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②·③ (생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조례 제7조는 제5조제1항제2호(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온라인 교육지원 서비스 제공)에 따라 추진하는 온라인 평생교육 교육지원 사업(서울런)의 지원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며,
- 안 제7조제1항제6호는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둘째 자녀 이상의 아동·청소년’에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아동·청소년’으로 개정하고, ‘재혼가정’에 대한 단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족의 모든 자녀(아동·청소년)가 서울런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여짐.
- ※ 안 제7조제1항제9호는 한글 어문 규정에 맞게 용어를 정비(띄어쓰기)하여 올바르게 표기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보여짐.

- 안 제7조제1항제6호의 다자녀가족에 대한 지원 확대는 다자녀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우리 사회의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나,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첫째, 조례 제7조는 취약계층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온라인 평생교육 교육지원 사업(서울런)의 근거 조항으로,
 - 다양한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별첨1)를 참고하여 다자녀가족이 취약계층(통상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해당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서울런의 목적(취약계층 어린이·청소년의 교육격차 해소)과 달리, 다자녀가족 지원은 사회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하기 위한 양육부담(교육비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지원의 목적과 취지가 서로 상이한바, 교육지원 대상을 각 특성에 맞게 세분화거나, 지원 목적에 따라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규정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둘째, 다자녀가족의 모든 자녀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전절차(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이행이 필요한 상황으로, 본 개정안 제출 이후 보건복지부로부터 ‘협의완료 결정’이 통보(사회보장조정과-2199, '26.6.5.) 되어 사전절차는 이행된 것으로 보여짐.

※ 사회보장제도 협의완료에 따른 지원 대상 확대(예정)

1. 3자녀 이상 가족의 ‘둘째 자녀 이상’ → 3자녀 이상 가족의 모든 자녀(중위소득 100% 이하)
2.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3. 국가보훈대상자 손자녀 미지원 → 국가보훈대상자 손자녀(중위소득 100% 이하)

- 다만, 사회보장 협의 없이는 지원 대상의 확대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사전 절차가 미이행된 개정안을 제출하여 심각한 정책 혼선을 반복(조례상 지원 대상과 서울된 실제 지원 대상의 불일치 → 정책 신뢰도 저하, 이용자 혼란 초래 등)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평생교육국(교육지원정책과)의 사전절차 이행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현재 조례 제7조제1항 제1호(중위소득 85% 이하)와 제6호(다자녀가족의 둘째 자녀 이상)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미완료됨에 따라 실제 제1호는 '중위소득 60% 이하'만 지원, 제6호는 지원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또한, 비용추계 결과 다자녀가족 지원 확대로 향후 5년간 약 137억원 이상의 추가 재원이 소요('26년 8억원, '27년 22억원, '28년 29억원, '29년 36억원, '30년 43억원) 될 예정이며, 중위소득 기준 완화(60% 이하 → 80% 이하)에 따른 지원 대상자 확대를 고려할 때, 서울된 사업의 추가 재정부담 규모가 지나치게 과도한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자녀가족 지원대상 확대에 따른 비용 추계 〉

(단위:천원)

| 합 계 | 2026년 (하반기) | 2027년 | 2028년 | 2029년 | 2030년 |
|------------|----------------|-----------|-----------|-----------|-----------|
| 13,700,128 | 773,394 | 2,154,456 | 2,872,607 | 3,590,759 | 4,308,911 |

출처 : 본 개정안 비용추계서

〈 서울런 이용자 현황 (’25.5월말 기준) 〉

(단위: 명, %)

| 구 분 | | 인원(명) | 비율(%) | 비 고 |
|-----------|---|--------|-------|--|
| 합 계 | | 40,242 | 100.0 | |
| 제1호 및 제2호 | 중위소득 60% 이하 및 한부모가족 | 28,722 | 72.4 | 중위소득 60% 및 한부모가족 통계 구분 불가 (행안부 비대면 자격 확인 서비스를 통해 자동검증) ※ 조례상 중위소득 기준은 85% 이하이나, <u>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미완료</u> 로 60% 이하만 지원 중 |
| 제3호 | 다문화가족 | 5,394 | 14.0 | |
| 제4호 | 학교 밖 청소년 | 4,835 | 12.2 | |
| 제5호 | 북한이탈주민 | 109 | 0.2 | |
| 제6호 | 다자녀가족 아동·청소년 (둘째 자녀 이상) | - | - | ※ 지원 불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미완료) |
| 제7호 | 국가보훈대상자(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녀) 및 독립유공자 후손(배우자, 자녀, 손자녀 이하 6대손까지) | 821 | 0.9 | ※ 조례상 국가보훈대상자의 손자녀까지이나, <u>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미완료</u> 로 자녀까지만 지원 중 |
| 제8호 | 가족돌봄청년 | 14 | 0.0 | |
| 제9호 | 가정폭력 등 피해시설 입소 아동·청소년 | 13 | 0.0 | |
| 제10호 | 건강장애 등 학생 | 127 | 0.1 | |
| 제11호 | 아동보육시설 학생 | 207 | 0.2 | 관외아동 가입현황임 (관내아동은 제1호에 해당되어 구분 불가) |

출처 : 평생교육국 제출자료 재작성

- 셋째,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1년~2025년)은 2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규정하는 등 지원을 확대·강화하고 있고,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양성평등담당관)에서도 ‘둘 이상의 자녀 양육 가족’으로 확대 의견이 있었으며, 서울시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도 ‘다자녀가족’을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으로 정의하고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으나,
 - 본 개정안은 3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가족만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는바, 정부 및 서울시 정책의 일반적인 기준과 서울시의 지원 기준 간 정합성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양성평등담당관에서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상 ‘다자녀 가족’ 기준에 준하여 둘 이상 자녀 양육 가족으로 대상 확대 제안’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평생교육국은 미반영(급격한 예산 소요 우려, 순차 확대 검토)함.

※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 가족”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협의완료 결정’ 부대의견(사회보장조정과-2199, '26.6.5.)과 같이 서울시는 교육격차 완화라는 목적의 적정성은 인정될 수 있으나, 목적을 실현하는 수단이 공교육 체계 내 개선과 보완이 아닌 민간 교육콘텐츠 제공이라는 점에서 수단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적정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서울시와 교육청 간 역할 분담, 공교육 경쟁력 강화 및 연계성, 사업 수행 주체의 적합성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보건복지부의 ‘협의완료 결정’에 따른 부대의견

| | |
|------------|---|
| 필수 검토사항 | <p>- 現 정부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학교 교과교습을 위한 사설학원 수강료를 공공재원으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한 축소 및 공교육 강화 체감을 위한 노력 필요</p> <p>*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정책방안(‘26.4.1.)」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 내로 흡수</p> |
|------------|---|

| | | | |
|---------|-------|-------|-------|
| 전 문 위 원 | 정 찬 일 | 입법조사관 | 최 현 중 |
|---------|-------|-------|-------|

별첨1. 각 법령에서 정의하는 취약계층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정의)제2호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취약계층의 구체적 기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
 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1년 이상 장기실업자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시행령」 제2조(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장애학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격교육 취약계층 학생”이란 교육기관에 재학하는 다음 각 호의 학생을 말한다.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학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자녀인 학생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
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인 학생
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또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인 학생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학생으로서 원격교육과 관련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학생

·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제5호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47조의5제1항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
 - 나.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50

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다.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4. 그 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여행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사회적 취약계층의 범위) 법 제1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6.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